

2022년(상·하반기)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우리는 청탁금지제도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합니다.

□ 상담 6건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1	업무 관계로 알게 된 공직 유관단체 소속 직원에게 결혼 축의금(5만원 이내)을 받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p>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p> <p>나.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 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대가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다. 아울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어 가액범위라 하더라도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수수가 금지되며, 직접적 직무관련자라함은 인·허가 관련 이익이나 불이익을직접적으로 받는 대상, 수사·감사·감독·검사·시험·단속·행정지도 등의 직접적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절차진행이나 계약 진행중인 대상, 정책·사업 등의 결정이나집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 등을 말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같은 부서 직원이 0000 선물하기로 기프티콘을 보내 왔습니다. 업무관련성이 없고 별다른 친분도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가. 공직자들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나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으로 선물에 해당되지 않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하여 주시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거절의사를 표시하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거나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지체없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객관적인 전달방법인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반환하고 영수증 등 반환 증명자료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	관내 00대학교와 업무협약을 거쳐 현재 00소방서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음 대학교와 대학생 의용소방대 활동 등의 협력 논의를 위한 간담회 시 식사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p>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p> <p>나.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 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대가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다. 아울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목적이 인정되어 가액범위라 하더라도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수수가 금지되며, 직접적 직무관련자라함은 인·허가 관련 이익이나 불이익을직접적으로 받는 대상, 수사·감사·감독·검사·시험·단속·행정지도 등의 직접적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절차진행이나 계약 진행중인 대상, 정책·사업 등의 결정이나집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 등을 말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4	<p>업무유관기관인 OO 주관으로 벤치마킹을 가는데 숙박, 교통 등 제공 받으면 청탁 금지법에 저촉되는지?</p>	<p>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 예외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p> <p>나.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어 가액범위라 하더라도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수수가 금지되며, 직접적 직무관련자라함은 인·허가관련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 수사·감사·감독·검사·시험·단속·행정지도등의 직접적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절차진행이나 계약진행 중인 대상, 정책·사업등의 결정이나 집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 등을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주어진 정보가 제한되어 판단의 한계가 있지만 관련단체는 직무관련성이 밀접해보이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p>	
5	<p>명절 시 선물 가액이 일시적으로 상향되는데</p> <p>올해 추석은 그 기간이 언제 인가요?</p>	<p>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p>	

연번	상답내용	상답결과	조치사항
		<p>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합니다.</p> <p>나. 올해 추석 상향된 선물 가액이 적용되는 2022년 추석명절 기간은 8.17.(수)부터 9.15.(목)까지 입니다.</p>	
6	OOOO 선물하기 등으로 기프티콘을 공무원 간 주고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p>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p> <p>나.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나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으로 선물에 해당되지 않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다.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하여 주시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거절의사를 표시하거나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지체없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객관적인 전달방법인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반환하고 영수증 등 반환 증명자료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p>	

□ 신고 1건

연번	신고내용	조치사항	비고
1	금품 등 제공 자진신고	<p>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공자와 수수자의 관계는 직접적 직무관련자로 보기 어려워 가액 범위의 선물은 같은 법 제8호제4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로 볼 수 있어 법에 저촉되지 않음.</p> <p>나.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종결처리 등) 제1항제6호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종결 처리함</p>	-